

농촌마을의 활성화와 지역통합의 과제: 문화적 접근

윤근섭 · 송정기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Rural Village and its Some Issues toward a Regional Integration: A Cultural Approach

Keun-Sup Yoon · Jeong-Key Song

Dept. of Sociology, Chonbuk National Univ., Chonju 561-756, Korea

적 요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화 등과 같은 한국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역에 뿌리 내린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단서를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에서 찾아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순창군의 사례를 들어 마을 수준의 전통문화의 존재형태와 마을조직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군단위의 지역활성화 계획에 관련시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산제와 같은 농촌 마을을 단위로 하는 종교의례가 부락주민의 통합과 일체감에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문화가 군단위의 지역활성화 방안과 연계될 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생활시설의 개선과 같은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순창군은 극심한 인구감소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와 기반시설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약점을 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순창고추장을 포함한 식문화와 결합시킴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농업에 의존하는 과소 산촌지역에서 새로운 전원관광사업으로의 산업적 전환을 통해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대응하려는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재구조화 과정의 하나이며, 지역 자원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활성화 및 위상을 높이려는 내발적 발전론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많은 과제 가운데에서도 마을단위의 개성에 입각한 테마 사업의 추진 및 주민참여, 인재양성 등을 논의하면서 마을단위와 군단위의 통합적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오늘날의 한국 농촌은 몇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현상과 생활 및 생산기반의 취약이라는 농촌의 존립 위기이며¹⁾, 다른 하나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른 농

업 자체의 위기인 것이다. 이 같은 위기에 대한 대응은 농촌과 농업의 위상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구조화란 기존의 농촌사회 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적응 능력을 키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외환 및 금융위기는 한국 농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UR

충격 이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8년으로 완료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부단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99년 말부터는 제2의 UR 농산물 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저성장, 고금리,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졌으며,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농업분야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환율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료, 유통,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랐다.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 농가로서는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은 감소하고 금리는 오름으로써 부채 상황도 어려워졌다. 농업 관련 산업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부족, 금리 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강정일 외, 1998), 1998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축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여 농업생산이 전년 대비 3.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998~2001년에는 농업성장률이 연평균 1.3~1.7% 감소하는 부(負)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3년 7월에는 신농정 5개년계획이 발표되어 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고 이를 위해 농어촌 투융자를 대폭 확대하여 42조에 이르는 구조개선 투융자계획과 15조의 농특세 신설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90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률이 성장세로 회복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²⁾ 규모화되어 전문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이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품목별로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거나 생산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시 및 의료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지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은 미약하여 농가의 80%가 넘

는 중소농이 경쟁력 대책에서 제외되고, 농촌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하부구조가 미흡하여 농외취업도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국제협상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농정여건의 변화와 투융자 증가에 따른 농정추진 체계개선이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분명히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는 한국농촌과 농업구조에 커다란 충격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해외지역의 사례에서는 개방화에 따른 농촌사회와 농민이 받는 심각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과 발전방향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경제적 적응 및 대응의 문제로서만 인식된 나머지 농업의 주체인 농민과 사회적 공간인 농촌의 유기적 관련을 고려한 총체적 재구조화의 시도는 미약하거나 온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경제적 대응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한 방안으로서 최근 지역활성화의 계기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효율중심적인 경제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신농정은 과거와 비교해 경제에서 사회·문화·도시·소비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농업의 근본적 특성은 도시 제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논리를 전제로 농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된다. 이와 같은 경쟁과 효율성 우선의 농업문제 인식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나 환경보전의 목표와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정책적

합의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는 앞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농촌의 문화적 전통과 효율성과의 조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농촌이 갖는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농업의 근대화 과정은 개별농가의 경제적 자립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는 농업의 현대화에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과 문화가 결코 근대적인 요소들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오히려 최근의 일본 지역에서 보여지는 "무라오코시"(村おこし)운동은 지역의 문화를 재평가하고 이를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의 전통과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화와 세계화시대의 농업정책은 농촌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가의 개별화와 차별화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영농주체의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통합을 위한 분석단위의 적절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농촌은 가족공동체, 생활공동체, 생산공동체, 사회적 공동체로서 특징지워지는 사회이다(최재석, 1973; 홍동식, 1987; 김일철, 1994).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농촌은 농업의 분화와 함께 개인주의화와 사회관계의 이질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적 구조의 해체와 재구조화를 요구함으로써 소위 '경쟁적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화는 농촌사회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적응력을 갖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역단위의 공동적 대응의 필요와 가능성은 없는가? 새로운 정책적 대응에는 지역단위의 공동적 대응에 관한 강조가 제한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국가주도의 하향식(top-down)의 농업정책이 많은 실패를 가져왔었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우리는 주체로서의 농민의 설정과 공동적 대응, 지역에 뿌리내린 자원의 동원, 국가수준에서 지역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들의 협동과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akker, 1995).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이나 사회통합의 기본단위가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는 별도의 행정적 단위로 설정되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끊임없이 분리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질서와 통합의 단위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초단위로서 마을을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문화나 지역통합은 더 이상 지역발전에 유효성을 갖지 않는다. 최근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각종 문화행사나 이벤트 등이 개별사업으로서보다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의한 성공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때, 문제는 지역의 공동적 대응과 주민 통합을 가능케 하는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대응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개별적 차별화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효율성 우선의 경쟁원리에 기초한 산업으로서의 농업, 개별화된 생활양식의 추구 등은 도시와 농촌의 공생적 원리 혹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원리와는 이념적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부합하는 여러 전략을 지방 수준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농정하에 있으면서도 지역이 지역의 개성에 입각하여 주체적, 창의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는 내발적 발전(츠루미 카즈코, 1990)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가 현대사회의 일반적 추세라면 그 양면에 있는 지방화는 하나의 대안이며 결코 전체적인 추세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송정기, 1994: 29-32, 1995a: 70). 또한 농촌이 기능적으로 재조정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가치체계의 창출 및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등이 기초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로 농촌의 전통성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화 등과 같은 한국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역에 뿌리내린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단서를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에서 찾아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마

을수준의 전통문화의 존재형태와 마을조직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군단위의 지역활성화 계획에 관련시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가능성과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역활성화와 지역통합에 선행적 고찰

1. 지역활성화의 선행 조건

개방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본과 정보의 유통은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크게 변용되어진 농촌사회에 심각한 충격과 위기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국가 정책차원의 대응 및 학술회의나 심포지움 등의 학문적 차원의 대응이 있어 왔다. 이같은 논의에서의 핵심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농업구조와 조직재편이라는 정책적 전략과 새로운 농업질서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가치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한국농촌사회학회, 1995; 송정기, 1994; 윤수중, 1995).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특화산업의 육성, 농업후계자의 보호와 육성, 노인복지에의 대응, 유기농업의 확산, 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들은 주로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한 나머지 농촌과 농민의 유기적 관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개방화와 세계화라는 외압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의 토지관계와 영농형태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사회구조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이나 접근의 단위가 주로 광범위한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거나 농업경영체로서의 개별 가구의 대응에 관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마을을 단위로 하는 문화적·공동적 대응에 관한 접근은 기존의 문헌에서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사례 연구에서는 촌락단위의 개성에 입각한 지역활성화 방안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지나치게 성공적 사례만을 이념형적으로 기술하거나 역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맥락 그리고 지역내부의 동학 등을 무시하고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통마을

의 문화전승이 지속되고 변용되는 역사적 과정이 어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오늘날의 지역통합에 결부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그들의 전통문화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원들을 동원하여 에너지를 끊임없이 창출하는가 하는 자원동원론적 관점(McCarthy & Zald, 1977)은 농촌연구에 매우 유용한 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것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설정하는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정교화가 급후의 과제이다.

또한 지구규모의 환경악화에 대한 농업 사이드에서의 대응은 환경친화형 농업, 생태발전(ecodevelopment),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농업 및 농촌정책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에 뿌리내린 생산방식과 유기농법, 적정기술의 수용, 지역문화의 다양성 인정, 농업과 농촌이 갖는 환경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송정기, 1995b; 나카무라 히사시/윤형근 역, 1995; 후루사와 코오유우, 1988; Ghai, 1994; Bakker, 1995). 이처럼 오늘날의 농촌적 대응은 경쟁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논리, 공생의 논리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도 문화적 요인에 기초한 지역통합은 농촌발전의 전제인 것이다.

사실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지역활성화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그 가운데는 이를 위한 실천 활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과소 지역 지자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 교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앙의존적이고 비독창적인 지역활성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역이 스스로 지혜를 내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지만 보조금 의존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도 현실이다.

현 단계의 지역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중앙주도의 하향식 지역정책과 획일적인 보조금 행정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려는 지역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육성 기

반을 침해함으로써 부의 분배가 실현되지 않거나 창출된 자금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등 지역기반의 형성과 유리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산업의 유치는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고유의 장점과 특성이 사장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역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지가 결여됨으로서 주체적이고 개성적, 창의적인 지역활성화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조차도 “지역의 자연 조건이나 입지가 좋지 않다”, “지역경제의 산업 구조가 후진적이다”, “고용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민의 의식구조가 보수적이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명보다는 마이너스 발상을 버리고 플러스 발상을 갖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발상을 갖는 한 지역은 결코 활성화할 수 없다. 여기서 마이너스 발상이란 지역의 결점이나 약점, 악조건만을 내세워 지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플러스 발상이란 지역의 장점과 강점, 좋은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발견함과 동시에 지역의 결점과 약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지역을 보면 장점이나 훌륭한 지역자원이 거의 없는 곳으로 보아왔던 지역도 상당한 지역활성화의 재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북해도나 동북지방의 사람들에게 겨울동안 폭설은 일상적인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산업이 정체되는 등 눈이 지역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플러스 발상을 하면 눈이 지역활성화의 귀중한 지역자원이 되는 것이다. 삿포로의 눈축제나 니이가타현에 있는 이리히로세 마을(入廣瀬村)의 “눈치우기 관광(雪おろしツアー)”과 같은 시도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다. 특히 후자는 “遊雪”을 테마로 눈을 즐기는 즐거움을 알도록 폭설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이다. 이곳에서는 “大遊雪會上스포츠볼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당초 지역의 주민에게는 하기 싫던 눈치우기가 일부러 눈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일단 해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의 약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석인 것이다(야마자키 미츠르, 1991: 138).

2. 종교의례와 지역통합

많은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물음의 하나는 후기산업사회 상황에서 “농촌의 해체”, “공동체의 소멸”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전통적·공동체적 요소가 엄연히 지속하고 있으며 또 기능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은 종교의 영역인 마을단위의 전통적 종교의례나 신앙의 측면에서 더욱 잘 발견된다. 종족마을³⁾에 있어서 조상숭배는 시제나 기제 등을 통해 문중의 결속과 지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단일한 공간적 범주를 넘어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락제와 같이 마을단위의 자연신에 대한 숭배나 농경 및 마을에 관련된 종교의례나 행위가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로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곳도 발견된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노력을 단순한 “유행”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의 적극적 기능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추구할 것인가?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통문화란 주로 마을을 단위로 한 종교의례와 신앙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할 것이다. 여기서 농촌마을이란 농촌사회 생활의 기본적 단위가 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지연 혹은 혈연을 통해 전개되는 사회관계와 지역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화는 주로 마을의 동제와 부락제, 당산제, 문중의 시제와 기제 등의 종교의례와 행위에 한정한다. 이것은 농촌마을의 여러 문화적 요소가 주로 종교의례에 반영되고 있을뿐더러,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성원들의 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나 문화의 개념은 매우 복잡적이며, 특히 마을단위의 분석이라 할지라도 종교의례는 지연적 관계에 의해 마을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과 혈연을 매개로 종족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 혹은 이 두가지가 복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화로서의 종교의례와 행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영역으로 간주될 정도로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연구들은 외연적 혹은 내연적 종교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종교와 사회구조와의 관련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역발전에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하겠다. 다만 최근의 관광인류학이나 관광사회학의 연구들(전경수, 1994; 딘 맥켈널, 1994; 야마시타 신지, 1996)은 위와 관련한 주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종교의례의 기능에 관한 고전적 연구는 뒤르케임(E. Durkheim, 1893=1993)의 종교의례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결속은 지역에 대한 동일시나 애착정도에 비례하며 그것들은 주로 종교집단을 통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Hunter, 1975; Kasarda & Janowitz, 1974; Wasserman, 1982; Wilkinson, 1986; Buttel et al., 1979; Brown et al., 1989; Goudy, 1990). 뒤르케임의 사회통합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과 집단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통합이란 특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곳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갖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 바꾸어 말하면 지역에 대한 일체감이나 동일시(identification) 혹은 결속의 정도를 이야기한다. 그것들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화된 것으로 세대를 넘어 전승된 그러나 동시에 개개인들의 의식과 행위에 의해 재하여 구속하는 성질을 갖는다. 지역생활에 뿌리내린 공통의 가치와 신념체계, 즉 문화는 지역통합을 위해 기능한다. 이러한 문화는 공동의 협동적 생활에서 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삶의 지혜”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촌은 그간의 도시화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친족결합에 근거한 가족공동체로서의 농촌마을은 개인주의화하였고, 상부상조적인 관행도 농업의 분화와 기술발달에 의해 분화하였으며, 직업과 소득 및 교육의 분화에 따라 공동체적 문화도 다양한 하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인간적 조직과 전통적

권위에 의한 사회적 연대는 점차 공식적이고 계약적 관계가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김일철, 1995:18-19). 이 같은 재구조화 과정은 불가피하게도 농촌에 심각한 “긴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재구조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농촌의 전통문화를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새로운 재구조화 정책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고려가 없이 그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의 정책은 효율성 우선의 경쟁과 편의주의에 기초해 있다. 신자유주의하의 농업정책은 그러한 편의주의와 효율주의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같은 정책들이 가져온 문제는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식품의 생산, 물리적 환경의 보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존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곳이다(김종숙·민상기, 1994).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는 바로 농촌의 위기를 초래한 후기산업사회의 속성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진하고 공생의 원리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에 있어서 지역통합을 위한 조직적 기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혈연과 지연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다. 혈연에 의해 형성된 종족마을은 혈연을 기초로 한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의식은 가계계승의식, 조상숭배의식, 동조의식, 배타적 족결합의식(이창기, 1991)을 말한다. 이는 사회의 어떤 다른 자발적 결사체보다도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지연에 기초한 지역조직은 거주와 생활의 공동에서 제기되는 생산과 소비, 장의와 제사를 위한 여러 조직을 갖는다. 이러한 조직들은 우리 농촌사회를 지탱해왔고 또 지탱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러한 조직이 바로 마을을 단위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통문화가 유지, 생성, 지속, 변용되는 곳이 바로 마을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지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많은 논의는 “마치즈꾸리”(町造り)나 “무라오코시”(村おこし)와 같이 지역진흥에 관련하여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등이 지역통합과 활성화의 동원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란 곧 “삶의 지혜”이며, 그

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성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성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근대성이 낳은 폐해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담론구조의 핵을 이루는 것이다(Giddens, 1990; Lash, 1990; Beck, 1992). 따라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 농촌의 문화요소로서 제사, 부락제, 솟대, 지신밟기 등의 종교의례와 행위 등은 지역통합의 계기로서 그리고 지역활성화의 잠재적 자원으로서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의례를 과연 마을 수준에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 농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종교의례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를 주민들이 인식하고 자원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사가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및 지역의 산업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 농촌이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문화를 재평가하고 지역의 조직과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을 전체가 단합하고 결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문화를 송출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III. 사례지역의 구조와 특성

1.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의 방법에 의

존하고 있다. 문헌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각 지역의 사례에 관한 보고서, 정부간행물 및 통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례분석은 전북지역의 농촌마을을 사례로 면접과 참여관찰에 의한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생활의 일상성”과 “의례의 비밀상상”이라는 축을 설정하여 비밀상상에 관련된 자연신 혹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관행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즉 사례 선정의 조건으로 일상생활로서의 개인적 신앙의 형태와는 분리된 그러나 마을단위의 통합 혹은 종족적 결합에 관련된 두 마을을 선정하였다. 사례가 속해 있는 전북 순창군은 전형적인 산간 농업지역으로 농업에 관련된 전통과 마을을 단위로 하는 종교관행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선정된 두 마을은 모두 순창군 순창읍내의 자연부락으로 순창읍의 배후 농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농가와 비농가가 혼합되어 있어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된 P부락은 지연적 결합 원리에 의해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N부락은 지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내부에 혈연적 결합원리가 약간 관철되는 마을이다. P부락은 현재까지도 당산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N부락은 새마을 사업 이후 당산제를 폐지한 곳이다.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각각의 마을은 사회적 결합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마을의 정치적·경제적 구조에 따라서 다른 조직원리와 종교행위가 나타나며, 그 결과로 지역통합의 과제도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사례조사의 한계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내의 적용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보다 풍부한 내용과 사건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면접조사에서는 현지주민 및 행정기관 관계자와의 심층조사(indepth interview)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 마을회의록, 각종 규약, 서간문, 고문서, 향토사료 등 공식·비공식 간행물 등의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통해 주로 질적·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2.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가. 순창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례지역이 속해 있는 순창군은 전라북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남원군, 정읍군, 임실군 등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전라남도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에 접하여 도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의 생활권을 갖고 있다.

순창군은 도내 중심도시인 전주에서 58km 떨어져 있어 버스나 자가용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군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가 67%, 농경지가 24%를 차지하는 준산간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로 인해 순창군은 군내의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산간 농업지역이며, 그 결과 제2, 3차 산업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세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순창군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이고 세외수입은 9.1%로 재정자립도가 12.6%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세교부세는 41.1%, 지방양여금이 12.6%, 그리고 보조금이 34.7%로 구성되어 군 자체적 재원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고 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리적, 산업적 입지 특성 때문에 순창군에는 풍부한 전통이 살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음식문화가 잘 보존되고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은 철분이 많아 그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추장을 상품화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제조업체가 읍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최근에는 전통고추장 보존협회를 구성하고 120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백산리에 전통특산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한 바 있다. 현재는 60호 가운데 약 47호가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순창읍 가잠리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전통음식으로 유명한 집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한편 공업단지나 산업시설이 입지해 있지 않은 이유로 전통마을이나 민속이 풍부한 것도 순창군의 특징이다. 그만큼 개발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순창군에는 있다. 군립공원인 강천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유명하며, 소설 “남부군”으로 알려진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회문산에는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찾고 있다.

순창군은 과거 삼한시대에 옥천(沃川)으로 불렸으며 현재에도 매년 10월 15일에 유림들의 주관으로 군민화합과 풍년을 기약하는 “옥천 순화줄다리기” 행사가 군민의 날에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과 민속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남근석을 중심으로 한 남근신앙이 풍부하고 장승제, 당산제 등이 마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자연풍토, 음식, 전통문화와 종교의례 등은 산간 농업지역인 순창군의 고유한 특징이며 후술하게 될 지역활성화의 잠재력이 될 것이다.

순창군내의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면, 96년 10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수는 12,793호, 인구는 38,679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약 2%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함으로써 전형적인 과소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순창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60년으로 194,700명이었다. 그러나 1969년에는 100,44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71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는 93,444명으로 10만을 약간 밑도는 정도이었으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1991년에는 42,485명으로 불과 20년 사이에 다시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되었다. (표 1)은 1971년부터 1996년 사이의 순창군 인구현황 및 감소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는 산간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취업기회가 제한된 순창군으로부터 교육 및 취업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장년층의 감소 및 출생률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장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생률의 저하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결부되어 지역의 재정능력과 생산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나. 사례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례지역의 하나인 P부락은 98년 조사당시 87호 중 농가 80호, 비농가 7호로 구성되어 있다. 작부는 미맥중심의 벼농사이다. 4개 반으로 구성된 P부락은 지연적 결합원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장을 중심으로 한 부락총회와 반상회가 공식적 조직이다. 마을 전체를 포섭하는 상계와 같은 조직은 없고 20-30호를 단위로 한 위친계가 소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인회로 구성된 부락 원로들이 마을운영에 많은 결정력

표 1. 순창군의 각년도별 인구 및 인구감소율

년도별	1971년	1976년	1979년	1987년	1991년	1996년
인구수(명)	93,444	89,499	77,518	54,783	42,485	38,638
인구감소율*	100.0	95.8	83.0	58.6	45.5	41.3

*197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하여 대비한 수치임
출처: 순창군 통계연감, 각년도.

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군 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S씨는 부락의 추진위원장이며 동시에 지역 유지로서 부락의 일에 많은 결정력을 갖는 리더로 평가되고 있다. P부락에 인접해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이 자리해 있고 부락 앞으로 전남 담양으로 연결되는 국도 24호선이 통과하고 있다.

다른 사례지역인 N부락은 88호 중 농가 58호, 비농가 30호로 혼주화가 진행된 근교농촌마을이다. 행정구역상 현재 3개 반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 뒤를 통과하는 88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신주택이 만들어졌고 마을입구에 순창의료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에 들어와 세대수는 모두 107세대이다. 마을의 주요생산물은 미작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고추와 참깨 등을 약간 경작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농가들이 축산을 하였으나 수입자유화 이후 축산농가가 줄기 시작하여 현재는 2호 정도만이 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농지 소유면적으로 보아 가장 큰 농가는 2호 정도로 각각 4,500평과 4,000평 정도이며 임차 등을 포함한 경작면적이 가장 큰 사람은 각각 10,000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전남 여수에 이르는 국도 27번이 지나가고 있고 마을 뒤로는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 당시 마을공유립을 매각하여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현재는 2,400만원 정도의 마을 자산이 되었다. 마을조직으로는 총회와 반상회가 있고 이장,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노인회장 등의 직책이 있다. 비공식적 조직으로는 30명 정도 규모의 위친계가 2개 있고 동갑계나 부인계 등 10여 개의 친목계가 있다. N부락의 주요과제는 농로 포장과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도 사업이라고 한다.

N부락은 고령 申씨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으나 22

호만이 친족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실학자 신경준의 생가가 있고 신말주의 유허비와 정려 그리고 귀래정(歸來亭)이라는 지정문화재가 남아 있다. 귀래정은 원래 세조 2년(1457)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현재의 건물은 1974년에 재건되었다. 신말주는 수양대군(세조)이 그의 조카 단종을 폐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에 불만을 품고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 이 마을로 낙향하여 귀래정을 짓고, 한운야학(閑雲野鶴)을 벗삼아 시문으로 소일하였으며, 이것이 이 마을 동족형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고령 신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관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마을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형적인 종족마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고령신씨 귀래공과 화수회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공간과 세대를 넘어 종족간의 결속과 단합을 추구하고 있다.

1979년도 인구는 P부락이 527명, N부락이 430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각각 326명, 305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마을의 인구감소 현상은 교육 및 취업기회를 찾아 마을을 떠난 청장년층의 유출과 이로 인한 낮은 출생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2)는 두 사례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마을 모두 소년인구인 0~14세 인구가 P부락의 경우는 17%, N부락의 경우는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두 부락 모두 1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마을 모두 순창읍의 배후지역으로 비농가.수가 많고 출근인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격절된 산촌 마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인구

표 2. 조사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1996년)

(단위: 명)

연령집단	P부락			N부락		
	남	여	계	남	여	계
0-14세	26(15.9)	29(17.9)	55(16.9)	19(12.3)	20(13.2)	39(12.8)
15-39세	75(45.7)	59(36.4)	134(41.1)	66(42.9)	51(33.8)	117(38.3)
40-64세	42(25.6)	50(30.9)	92(28.2)	49(31.8)	58(38.4)	107(35.1)
65세이상	21(12.8)	24(14.8)	45(13.8)	20(13.0)	22(14.6)	42(13.8)
계	164(100.0)	162(100.0)	326(100.0)	154(100.0)	151(100.0)	305(100.0)

출처: 1996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기초자료를 재작성한 것임.

피라밋을 보일지라도 혼주화와 함께 고령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성비는 P부락이 101.2, N부락이 102.0로서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IV. 사례지역의 전통문화와 행정적 대응

1. 사례지역의 전통문화와 잠재력

가. 전통문화로서의 당산제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통합적 요소를 갖는다. 즉 일정한 영역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충족하는 집합적 조직과 주민들의 공통된 이해를 나타내거나 일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나 그들의 일체감과 결속에 관한 집합적 표현과 같은 여러 지역사회 행위(Wilkinson, 197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순창군내의 마을을 단위로 행해지는 부락제, 지신밧기, 줄다리기 등의 각종 종교의례는 마을 주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연대를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왔다. 이것들은 화려한 비일상적 분위기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즐거움이며 내일에의 활력을 생성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로 마을 단위의 종교의례는 주민 생활에 안정과 윤택함을 주는 핵인 것이다.

부락을 단위로 하는 부락제 혹은 동제는 거주자의 공동이라는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생활을 위협하는

재액을 면하고 행복을 희구하는 심성에서 비롯된 제사의례이다. 부락제에는 당산제, 장승제, 수신제, 우물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주로 당산제를 행한다. 즉, 마을의 수호신인 부락신에게 부락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이다. 대개 당산제를 전후하여 농악을 하는 것은 부락신이 노하면 재앙이 있고 신을 즐겁게 하면 복을 준다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당산제는 성립되는 것이다. 이 고장의 많은 마을에서는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는 당산제를 폐지하면 그 해에 부락민에게 무슨 변고나 재앙이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당산제에는 부락민 전원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소수의 대표자가 제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관은 대개 마을 중년 이상의 남자로서 신망이 있고 가내에 출산이나 상사가 없는 사람으로 정해진다. 제관이 정해지면 제일을 택하는데 대개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행한다. 제관들은 제일 3일 전 내지 7일전부터 목욕재개하고 그 밖의 부락민도 이 때는 근신을 한다. 당산제는 마을 입구의 큰 당산목 밑으로 정하는데 거기에는 부락의 수호신의 정령이 나무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정결히 하고 주변에 새끼줄을 꼬아 백지로 두르고 주변에 황토를 점점으로 놓아 불결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 때에 외출한 사람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귀가를 할 수 없고 제수에 사용할 물이 공동 우물인 경우에는 금줄을 쳐서 역시 불결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수

는 대개 어물은 사용치 않고 돼지머리, 술, 밥, 떡, 과일, 야채를 쓴다. 특히 제주(祭酒)는 정결한 집에서 양조하였다고 한다. 만일 술맛이 좋지 않을 때는 제계(齊戒)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시 택일하고 술도 다시 양조하여 제사를 다시 지내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제관들은 제일 당일에 다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정성을 다하여 제사에 참배한다. 제식은 일반 제사와 같이 초헌, 아헌, 종헌, 독축 등의 순서가 있다. 제향을 마치면 돼지머리는 당산나무 밑에 묻어 무거운 돌로 눌러 놓는다. 이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상을 당했거나 출산한 집에서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제수비용은 동제(洞財)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당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방식으로 각출하는데 상가나 출산한 집은 제외하고 있다. (순창군지편찬위원회, 1982: 867)

나. 사례지역의 당산제 특성과 존재형태

순창군내에는 아직까지도 당산제를 유지 실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남아 있다. 순창읍 백산마을, 팔덕면 청계리와 월곡리, 인계면 쌍암리 등이 그 곳들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와 폐지한 곳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마을은 이같은 전통적 종교의례를 지속시키는데 비해 다른 마을에서는 그것들을 폐지하게 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마을은 각각의 인구구성, 조직 원리, 리더 층의 존재 여부, 경제적 상태, 지리생태학적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부락의 내적 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마을들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변화가 마을들로 하여금 적응 과정에서 상이하게 혹은 유사하게 반응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

P부락의 당산제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시작되는데 먼저 저녁 10시경 윗당산에서 천령제(天靈祭, 天龍祭라고도 함)라는 별신제를 지낸다. 이는 산신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여기서 매굿을 세 번 치면 각 집에서는 이 때부터 음식을 장만하여 12시 경에

마을 안쪽에 있는 아랫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화주라 불리우는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을 3개월 전에 선정한다. 이때 그 부인도 생기복덕이 맞아야 한다고 한다. 당산제 당일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고기나 생선 같은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아랫당산에서 당산제가 끝난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새벽 3시에는 “조태거리”라는 곳에 제수 장만에 사용한 물을 화주가 받아서 버린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제앙과 재액을 버리는 의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화주가 화장실에만 다녀와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여 매우 신성시되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 당산제는 이장, 반장, 개발위원, 화주 등이 협의하여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부락기금으로 당산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각 호별로 각출해서 실시한다. 마을 사람이 객사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당산에 대한 치성이 부족해서라고 믿고 있다. 최근에는 당산제를 담당할 젊은층이 없어서 당산제를 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마을에 무슨 변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당산제는 부락민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관만이 당산제에 임하고 있다.

N부락의 당산제는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의 실시와 함께 미신으로 생각하여 사라졌으나, 당시에는 지금의 마을 뒷산 고속도로 뒷편에 당산나무가 있었고 반대 편에 있는 마을 뒷산에도 당산나무가 있어 2개의 윗당산(할아버지 당산)을 모셨고, 지금의 마을 경로당에 아랫당산이 있어 먼저 윗당산에서 제를 지내고 다음에 아랫당산에서 다시 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산제를 폐할 당시에는 노인들이 마을에 무슨 변고가 있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고속도로가 생긴 뒤에 마을에 사망자가 많아지자 이는 고속도로에 의해 윗당산의 천령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들은 모두 병이나 고령으로 죽은 것이었다고 한다.

음력 정월 14일 밤 12시 윗당산에서 천령제를 지내고 다시 다른 윗당산을 거쳐 아랫당산에서 제를 올리고 매굿을 치고나면 3-4시 정도가 되는데 당산제가 끝나야 각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대략 1주일 전에 부락 위원들이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화주로 정해 일주일간 목욕재계하고 몸을 정갈히 했으며 음식에도 주의해서 비린 것은 부정을 탄다하여 먹지 않았다고 한다.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마을 입구 두 곳에 대장군과 솟대를 세우고 대나무에 금줄을 쳤으며, 황토를 길이나 대문 앞에 듬성듬성 놓았다고 한다. 당시 공동 우물에도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았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당산제가 낭비적이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활시키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 P부락의 당산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비해 N부락의 당산제는 사라져 마을 청소년층의 기억속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N부락의 경우는 새마을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부락의 리더 층에 속하는 원로들이 지나치게 낭비적인 행사라고 주장하여 폐지했다고 한다. 반면에 P부락의 경우는 원로급에 해당하는 노인층에서 당산제를 폐하여 만일 변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장하여 지속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접 결과는 당산제의 존속 여부는 부락 지도자의 특성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산제의 존속여부는 다른 많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부락 당산제를 관찰했을 때 제관과 메국을 치는 사람을 포함해 참가자는 모두 7-8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노년층의 마을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젊은 층과의 면담에서는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메국을 치는 사람 중에는 고교생도 1명이 있었고 아랫당산에서 제를 지낼 때는 손녀 뺨이 되는 여학생 몇 명과 마을 주민 수 명,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온 공무원 2~3명이 참석을 하였다. 이미 이 마을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마을에서 당산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당산제에의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마을 주민들의 심성 속에 “우리 마을에서는 당산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이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리고 당산제가 갖는 종교적 차원과 별개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로서의 가치 혹은 볼거리라는 인식도 청

년층과 외부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 이 당산제라는 문화적 상징을 통해 마을 주민이라는 일체감과 동일시를 느끼고, 그것이 선대의 생활의 공동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라는 인식과 집합의식이야말로 분화되고 이질화된 혼주화 농촌에서 결속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할 것이지만, 어떻게 이 상징을 조작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그것을 마을의 복지와 활성화에 결부시킬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2.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

가. 농촌 재구조화와 대안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구규모의 재구조화 과정은 서로 다른 지역, 국가, 국제적 공간안에서 혹은 그것들 사이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촌에 있어서도 현대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조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축적의 위기는 이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생산과정의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 때는 비생산적이고 주변적이라고 생각되던 자원과 공간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많은 이유로 한때 경제활동의 배후지로 생각되던 농촌지역은 투자 우선지로 보여지고 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농촌공간은 거주공간, 레크리에이션, 어메니티(amenity)와 원생의 만끽, 쾌적한 환경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촌경제가 상대적 중요성을 갖았지만, 현대에는 농촌적 관념의 문화적 중요성에 훨씬 높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게마인샤프트나 이념형적 농촌 개념의 재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국제화되고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안에서 농촌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서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중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지탱해 온 노동철학이 쇠퇴하고 여가와 놀이 가운데서 자기실현이나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관광이라는 여가이용의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도 국

가나 지방자치체가 개발의 일환으로 관광에 역점을 두는 등 관광관련 산업이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관광의 대상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대상이 문화나 환경에 주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책당국자나 연구자들에게 관광과 문화, 그리고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특징짓는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단편화된 전통문화의 표상들이 관광이라는 맥락속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하여 이를 둘러싸고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문화의 개념을 확대하여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기능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조작되고 정치적으로 거러되며,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연출되고 소비되는 것”(야마시타 신지, 1996: 6)으로 새로이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와 관광과 경제의 상호관련은 최근 환경사회학에서 생태관광(eco tourism)으로 그리고 농촌사회학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등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 개념을 지역활성화에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에서 보고되는 많은 사례에서는 자연에 친화적인 관광, 자연에서 배우는 관광이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면서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테마 박물관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관광이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관심에 결부되어 있다면, 녹색관광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관광을 결부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광의 의미는 보고, 먹고, 배우며 체험하는 곳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이든 녹색관광이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그 활동이 지역에게 있어서 활성화에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전통사회를 담당해온 전 세대들의 자연과 밀착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게 된다. 그것은 전통기술에 근거한 산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산업으로 비약시킬 수 있는 차별화의 잠재력도 갖게되는 것이다.

나. 지자체의 대응 방안: 순창군의 경우

최근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의 유치 및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정책발굴 능력이나 주민 참여가 높지 않은 지자체 현실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기본 방향은 지역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공단건설이나 기업유치와는 달리 디자인, 관광과 같은 소프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지역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사실 낙후 혹은 과소지역이 고성장지 대규모산업유치와 같은 기존의 거점 성장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지역농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지장산업의 개발 방안, 관광 레크리에이션에 의한 지역개발 방안, 이벤트에 의한 지역활성화 방안, 전통예술 및 문화유산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의 조합에 의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도시로부터 떨어진 산간 농업지역으로 과소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산업화에서 소외된 결과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고추장과 비빔밥과 같은 지역상품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음식과 민속문화와 자연환경을 결합하면 지역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순창군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원관광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통한옥을 현대적으로 건립하여 60호 정도의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거립하고 있으며, 고추장 축

제와 고추장아가씨 선발대회, 성황대신제의 부활 및 순화줄다리기 등 각종 문화 행사와 이벤트 개발, 휴양지 조성 등 산촌마을을 개발하여 지역특산물과 문화를 관광을 통해 주민 소득에 결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녹색관광에 기초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순창군은 일본 우끼하町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녹색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 한국, 중국, 대만, 호주, 태국 등 6개국의 비슷한 농촌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상호교류 및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한 것으로 96년 일본 후쿠오카 우끼하町에서 총회를 열었고, 98년에는 한국 순창군에서 제2차 아시아 그린투어리즘 총회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소나무숲이 많은 동계면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외국인이나 도시민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지장산업의 개발을 구상중이며, 순창의 맑은 물과 자연환경을 소재로 산촌마을 개발하여 농원과 산림박물관을 세우는 동시에 자연에서 나는 산나물과 야채를 소재로 순창고추장과 결합하여 전주비빔밥과 차별화시킴으로써 비빔밥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상품화하는 등 도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보고, 먹고, 쉬는” 공간으로 전원관광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이같은 전원관광개발계획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초기 민박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연환경과 음식과 볼거리를 결합하는 좀더 복합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주민소득에 결부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관광이라는 사회적 수요에 지자체가 지역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여 최대한 상품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소 산촌지역의 현실에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창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결합하여 녹색관광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소개하였다.

분명히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녹색관광 사업은 획일적인 성장위주 산업에 대한 대안이다. 그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개발방식에 따라서는 고용증대 효과, 소득유발 효과, 지방세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이미지 제고, 환경보존과 공생적 가치 등 경제외적 효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산업이다. 또한 특정 자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후발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다. 물론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문제를 수반하는 일도 있다.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린” 자원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는 지역의 개성과 주민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되어 외부 자본이 유입되고 개발이익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개성을 잃고 유사한 유원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업이 관광객의 유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민이해가 우선되지 못하여 주체성과 특성이 무시되었다. 중앙의 논리, 개발사업자의 논리, 관광객 우선의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지역을 가꾼다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토대로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까지도 고려한 개발전략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중심의 관광개발 (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로서 지역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전략이어야 한다.

둘째는 지역잠재력의 개발과 활용이다. 지자체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지역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뛰어난 경관이나 환경이 없는 지역이라도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에게는 신선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건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형·무형의 문화재, 독특한 생활양식과 전통, 식문화 등의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 일본 후쿠이縣의 도카무라(利賀村)는 세계의 소바(메밀국수) 및 식문화를 전시한 소바향토자료관과 일본내 목공완구 5천여점을 전시한 완구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전남 담양과 안동에는 각각 하회탈박물관과 죽물박물관이 있다.

셋째는, 사업의 연속성과 유연성의 문제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당성과 입지 확보를 위해 지역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모조록 세운 녹색관광의 틀이 백지화되어 예산과 인력만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사업이 위축되거나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 사업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관광이 다른 지역산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는 인재양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문제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원과 인력이다. 이를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제3섹터 등의 논의는 있으나 인재를 확보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지역주민은 전문가가 아니다. 주민조직을 활용하고 육성하며 개발과정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관광개발 사업이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지역활성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여섯째는 마을단위의 테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는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농어촌휴양지, 관광농원 등의 개발은 공간적으로 주민과 분리되고 외부 대자본이 유입되어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은 자연과 혈연의 결속원리에 의해 잘 통합된 사회적 실체이며 생활의 공동에서 전승되어 온 문화와 일체감을 갖는 지역생활의 최소 단위

이다. 또한 주민이 주체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단위인 동시에 관광객이 목적으로 인식하는 실질적 단위이기도 하다. 개별 마을의 개성과 문화를 살려 이를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주민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논의할 수 있는 과제는 많다. 농촌의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농촌이라고 농사만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을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의 공동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을 소재로 마을의 문화를 외부로 송출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차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N부락의 경우 부락내 종족집단이 98년도 사업으로 보조금을 끌어들이어 사당을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사당건립이 단순한 종족집단만의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 부락을 떠나 있는 종족집단의 성원과 마을내의 비종족집단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부락외의 주민을 통합하고 그 취지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락의 비종족집단 주민에게도 생활의 공동에서 발생하는 일체감과 동일시를 줄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고 참가시켜 그것이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자긍심과 활성화의 계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을 단위로 뿌리내린 문화와 자원의 잠재력을 다시 평가하고, 만일 자원이 없다면 아이디어를 내어 주민이 합심하는 한편, 행정은 각 마을의 의지를 최대한 살려 이를 지역활성화에 통합할 때 낙후지역 혹은 후발지역은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인용문헌

- 1) 과소개념과 현상에 대해서는 윤근섭·송정기의 글(1995)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2) 강동일 외의 보고서(1998)에서는 96년 농가소득은 2,330만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96년 농가 평균 저축액은 1,570만원으로 부채 1,173만원을 상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말하는 종족마을은 흔히 동족부락, 동족촌, 씨족부락, 동성촌락 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기존 용어들의 개념적 혼동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제안하는 용어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일철 외(1998: 33-36)의 글에 잘 논의 정리되어 있다.

참고문헌

1. 강정일 외, 1998,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일철, 1994,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 운동, 나남출판.
3. 김일철, 1995, 한국 농업의 재구조화 과정, WTO 체제하의 세계각국의 농촌사회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한국농촌사회학회.
4. 김일철, 김필동, 문옥표, 송정기, 한도현, 한상복, 柿崎京一, 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충청남도 대호지면 도리리의 사례, 백산서당.
5.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6. 나카무라 히사시/윤형근 옮김, 1995,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지역자립의 경제학, 도서출판 한살림.
7. 딘 맥켄널/오상훈 역, 1994, 관광사회학, 일신사.
8. 문옥표, 1991,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농촌사회 창간호.
9. 정진영 외, 1995, 지금 왜 환경보전형 농업인가, 농민신문사.
10. 송정기, 1994, 국제화와 지방화에 관한 발전론적 논의, 정책연구 94-1, 경제사회연구원.
11. 송정기, 1995a, 공공성의 구조전환과 주민자치, 크리스찬아카데미(편) 주민자치·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12. 송정기, 1995b,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인간행위의 잠재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논문집(제40집), pp.15-27.
13. 송정기, 윤근섭, 1994, 과소지역의 형성과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4집, 한국농촌

사회학회.

14. 순창군지편찬위원회, 1982, 순창군지, 순창군.
15. 윤수종, 1995,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구조 재편(2), 농촌사회 제5집, 한국농촌사회학회.
16. 이창기, 1991, 한국 동족집단의 구성원리, 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17. 전경수, 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18. 최재석, 1976,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 한국농촌사회학회, 1995, WTO체제하의 세계각국의 농촌사회발전전략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한국농촌사회학회.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정책토론회 자료집-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
21. 홍동식, 1987,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22. 야마자키 미즈르(山崎充), 1991, 豊かな地方づくりを目指して, 日本, 中公新書.
23. 야마시타 신지(山下晉司), 1996, 観光人類學, 日本, 新曜社.
24. 츠루미 카즈코(鶴見和子), 1990, 内發的發展論, 東京大學出版會.
25. 후루사와 코오유우(古澤廣祐), 1988, 共生社會の論理, 學陽書房.
26. Bakker, J. I., Hans(ed), 1995, Sustainability and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27.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28. Brown, Ralph B., H. Reed Geertsen, and Richard S., Krannich, 1989,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Rural Sociology, 54(4), pp.568-586.
29. Buttel, Frederick H., Oscar B. Martinson, and E.A.Wilkening, 1979, Size of Place and Community Attachment: A Reconsider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6, pp.475-485.
30. Durkheim, Emile, 1893=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by) G. Simpson, New York, Macmillan.
31. Ghai, Dharam, 1994, Development and Environ-

- ment: Sustaining People and Nature, Blackwell Publishers.
32.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Press.
 33. Goudy, Willis J.,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 pp.178-198.
 34. Hunter, Albert, 1975, The Loss of Community: An Empirical Test through Repl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5), pp.537-552.
 35. Kasarda, John D., and Mor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 pp.328-339.
 36. Lash, Scott,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37. McCarthy, John D. & Mayer, N.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pp.1212-1241.
 38. Wasserman, Ira M., 1982, Size of Place in Relations to Community Attachment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 pp.412-436.
 39. Wilkinson, Kenneth P., 1970, The community as a social field, *Social Forces* 48 (March): pp.311-322.
 40. Wilkinson, Kenneth P., 1986, In Search of the Community in the Changing Countryside, *Rural Sociology*, 51(1), pp.1-17.